

교육부, '만5세 입학' 사실상 중단

교육차관 "계속 고집하겠다는 입장 아니다" "가능성 열어놓고 국민들 의견 수렴하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입학'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못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9일 밝혔다.

그는 "계속 고집을 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들겠다"고 공문화 여지를 열어 줬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

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장 차관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 저희가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

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가 얘기도 들겠다"고 공문화 의사를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비롯한 학제개편 내용을 제외했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발표됐다는 지적에 "사전에 협의 과정이나 소

시 설명하고 의견을 드리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전날인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 논란에 사의를 표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장관이 사퇴했어도, 만5세 초등취학 철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국민의 요구심과 불안의 불씨는 여전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하게 '정책 철회'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해상 부유물 제거로 안전한 바다지킴이 역할 특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6일 완도군 여서도 인근 해상에 떠 있는 약 200M(폭 50M) 페그물을 경비함정이 발견, 수거하여 항로상 항해하는 선박 스크류 감김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소방, 소화기로 간이창고 화재 피해저감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최근 진도군 고군면 주택 내 간이창고 화재가 발생했으나 비치해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진도=조상용기자



담양소방, 대형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공사장 관계자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최근 늘어나는 공사장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으로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장흥소방, 화재로부터 안전한 추석 보내기 화재예방 강화 추진

장흥소방서(서장 신항식)는 각종 시책을 재검토 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선제적 화재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에 대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무안소방, 축사화재 예방 관계자 간담회 추진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지난 5일 무안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무안소방시장 등 축사 관계자 3명, 축사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화재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무안=이성기기자



순천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 금융기관 감사장 전달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지난 8일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다액의 돈을 인출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순천시지부 과장 한모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전남도, 코로나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개시

투약의료기관 20곳서 상담 후 진행...전액 무상

전남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으로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무상 투약을 개시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여 시 코로나19 감염은 93%, 중증·사망은 50% 감소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화순전남대병원, 목포

중앙병원, 성가톨릭병원, 해남종합병원 등 20곳을 투약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섰다.

투약 대상은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환자,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등이다.

다만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세 이상, 몸무게 40kg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경우만 투약이 가능하다.

투약은 대상자가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최종 결정

되며, 지정된 날짜에 이뤄진다. 비용은 전액 무상 지원된다.

이부실드는 근육주사로 항체를 체내에 투여하면 수 시간 내 감염에 방호효과를 나타내며 효과는 최소 6개월간 지속된다.

코로나19 백신이 14일 이내 중화항체가 형성되고 세포 면역까지 유도하는 것과 달리, 이부실드는 체내에 충분한 항체 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항체를 직접 주입해 감염 예방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

백신과의 상호작용 방지를 위해 접종일로부터 14일 이후 투약이 가능하다. 이부실드 투약 후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은 간격에 상관없이 주사를 맞을 수 있다.

문권욱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중증면역저하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예방적 항체주사제를 투여 받도록 지정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며 "중증면역저자는 지정 의료기관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투약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부하 직원 성폭행 의혹...광주 현직 구청장 엄정 수사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경찰청 앞서 기자회견

광주·전남 여성단체가 성폭행 의혹을 받는 현직 구청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단체)은 9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간강"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피의자는 2018년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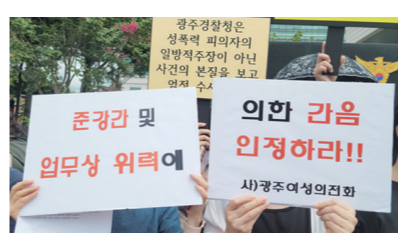
지방선거 모 광역단체장 후보 비서 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항거불능 상태인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선거캠프 총 책임자 직에 있으면서 당시 직접 피해자를 면접하고 채용했다. 피해자는 선거캠프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일자리를 보장 받기를 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피의자는 경제적 어려

움이 있었던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을 빌미 삼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간음했다"며 "위력은 폭행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에게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며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보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9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구청장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뾰족더위 절정

낮 기온이 36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9일 오후 해바라기가 가득 피어난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 앞 해변에 물놀이객이 찾아와 더위를 식히고 있다.

"로또 1등 감사" 가짜 후기 607억 가로챈 일당 검거

로또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 추천해준다는 수십 개의 온라인사이트를 개설해 6만4000여명으로부터 607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액 A(5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년간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 추천해주는 온라인 사이트 92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6만4104명으로부터 607억 4447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위조한 당첨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한 뒤 마치 특정 회원이 해당 사이트가 예상한 번호를 받아 당첨이 된 것처럼 속였다.

또 고액 당첨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가짜 ID 약 120만개를 생성해 허위의 고액당첨 후기를 게시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장기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던 회원들을 유인하기 위해 당첨번호

호가 발송된 직후 "미리 당첨 번호를 알려줬는데 사이트가 이용하지 않아 당첨 기회를 놓쳤다"며 제공시기를 조작한 번호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고액당첨을 위해서는 당첨 확률이 높은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VVIP회원' 등 600만원 상당의 고액 결제를 유도했다.

하지만 상품 등급에 따른 예측확률의 차이는 없었음 뿐더러 해당 예측번호는 피의자들이 '셀프조합'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 중인 사이트 및 수십개의 법인을 수시로 통·폐합 ▲사이트 상 회사 주소지 허위 기재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유도 ▲수수료 25% 제외 후 환불 ▲환불을 조건으로 민·형사 소송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하는 등 환불요구를 어렵게 만들어 환불을 회피했다.

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액은 약 100만원이었으며 많게는 약 7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통해 100명에 달하는 호텔 한 층 전체를 대여해 생활했다.

오유나기자